

너무 좋다, 박근혜 파면!

박근혜를 구속수사 하라

박근혜의 유산을 일소하자 황교안 내각도 유산이다



사진 조승진

박근혜 파면과
전망

2~5면

사드 배치와
중국의 경제 제재

8면

“트럼프 게이트”를
둘러싼 미국 지배자들
간의 갈등

6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거품 경제와
트럼프 정부

7면

인공지능 때문에
‘노동의 종말’?

온라인

광고

분노의 촛불 세대를 위한
토론 광장 4월 29일~30일

3면

이제 박근혜는 형사범죄 피의자일 뿐, 구속수사하라

지난 반년 동안 박근혜의 부패한 실상은 낱알이 까발려졌다. 박영수 특검이 시간이 부족해 더 밝혀내지 못했는데도, 드러난 권력 농단과 정경 유착의 추한 실상만으로도 결국 탄핵(파면)을 피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그동안 박근혜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재임 중 (내란죄를 제외한) 형사 소추(재판에 범죄자로 기소하는 것)를 금지한 헌법상 특권 덕분이었다. 이 특권 때문에 검찰도, 특검도 박근혜의 범죄를 밝혀 놓고도 '사실상 피의자'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죄인을 죄인이라 하지 못하고, 범죄를 처벌해 달라고 재판에 넘길 수도 없었던 것이다.

뻔뻔한 박근혜는 이런 특권을 수사 방해에 이용했다. 박근혜는 자신이 피의자가 아닌데도 여론 재판을 받는다

며 검찰과 특검의 대면 조사를 거부하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피했다.

지난해 말 자신의 턱밑까지 치달은 검찰 수사를 피하고 시간을 벌려고 박근혜는 검찰 수사를 못 믿겠다며 특검을 유도했다. 그러나 특검의 칼날도 자신의 목덜미를 향하자 똑같이 수사를 방해하고 매도하다가 끝내 황교안을 통해 특검을 해산시켜 버렸다.

형사 재판으로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헌법재판소가 무엇을 근거로 탄핵심판을 할 수 있느냐고 항변한 것도 가관이었다.

권력을 농단해 사익을 챙긴 범죄자가, 권력은커녕 권리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보통 사람들에게 '허물이 아예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호통 친 꼴이다.

한국인 수천만 명이 검찰·특검의

수사 결과와 언론의 폭로를 보며 확인한 사실을 “사상누각”, “소설”로 치부한 작태도 분노스럽긴 마찬가지다. 이는 보통 사람들의 판단 능력을 멸시한 오만방자함의 극치다.

박근혜는 도리어 태극기 집회가 촛불 집회의 두 배라는 등 가짜 뉴스와 관제 데모의 조종자로서의 면모만을 드러냈다.

이런 사악함과 뻔뻔함 때문에 퇴진 운동에 참가한 수많은 사람들이 즉각 퇴진뿐 아니라 즉각 구속을 그토록 목타지게 외쳤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더는 그런 특권 뒤에 숨을 수 없다. 기쁘기 그지없게도 이제 더는 박근혜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이다. 바로 그 일을 해 낸 우리 민중의 염원대로 박근혜를 정식으로 기소하고 구속수사해야 한다.



“이제는 구속이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즉각 구속을 목타지게 외쳐 왔다.

특검 수사 결과와 박근혜 파면

권력 농단과 정경 유착의 몸통

김문성

특검이 3월 6일 발표한 수사 결과를 봐도 삼성의 뇌물과 경영권 승계 특혜, 블랙리스트 통치, 최순실의 권력 농단 등 중대 범죄들의 몸통은 박근혜 본인이다.

결국 이 중 박근혜와 최순실의 권력 농단이 결국 박근혜 탄핵(파면) 사유가 됐다.

박영수 특검은 특검을 마친 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실체는 “크게 두 고리”라고 했다.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과 ‘정경 유착’. 그런데 그 두 고리를 잇는 점이 바로 박근혜다.

그러므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부패의 고리가 박근혜 정부의 친기업 정책과 연결됐다는 점에서 한국 자본주의의 추한 실상이 드러난 것이기도 하다.

삼성 총수 이재용은 무려 2백98억 원을 미르·K스포츠 재단과 최순실의 딸 정유라 등에 지원했다. 만일 박근혜의 말대로 최순실이 일개 사인(私人)이라면, 삼성이 왜 정유라에게 80억 원 가까운 돈을 지원했겠는가?

문제의 두 재단의 설립 실무를 최순실이 주도했지만, 최순실의 위세는 그와 박근혜의 특수한 관계(“경제 공동체”) 때문에 생긴 것이다.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을 위한 자금은 박근혜가 직접 재벌 총수들에게 요구했다. 청와대 수석인 안종범과 전경련이 중간 매개로 돈을 수급한 것이다.

이재용은 박근혜에게 경영권 승계 협조를 직접 요구했다. 특검 수사 결과, 이재용은 자기 개인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회사 돈을 뇌물로 쓴 횡령죄에, 뇌물의 대가로 정부 차원의 경영권 승계 지원을 받아 낸 뇌물죄를 동시에 저질렀다.

결국 박근혜의 지시로 박근혜의 장관 출신인 문형표가 나서 국민연금이 동원된 것이다. 국민연금이 이 과정에서 손실이 났든 안 났든 그건 부차적 문제다. 애초에 손대지 말아야 할 돈에 손을 댔 것이 진짜로 중대한 문제다. 대부분이 노동계급인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노후 연금을 기업주를 위해 동원한 것은 이중의 착취다.

그 결과 이재용은 거대 기업의 경영권을 무사히 승계했다. 게다가 박근혜는 대기업주들의 요구이자 삼성 이재용의 청원이기도 했던 서비스업발전법 등을 날치기 통과시키려고 애를 썼다. 박근혜의 정경 유착은 부패한 한국 자본주의의 민낯인 것이다.

이렇게 보면, 보수적인 현재가 박근혜와 최순실의 극히 협소한 국정 농단만을 탄핵 사유로 삼고 이재용 등 재벌 총수와 정권의 유착 문제를 탄핵 사유로 삼지 않은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 위배

또한 특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 사건을 “청와대 최고위층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 권력형 범죄”로서 “헌법의 본질적 가치에 위배되는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다.

특검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박근혜의 지시 아래 김기춘과 조윤선 등이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문화계 단체와 개인들을 몰아매고 배제하는 방식으로 쓴 것이 블랙리스트 통치다.

특검은 “전혀 진보 또는 좌파라는 분류를 받은 바 없는” 문학동네가 문인들의 세월호 참사 추모글을 모아 책을 낸 것을 ‘좌편향’이라고 낙인 찍고 불이익을 준 것에 주목했다. 중앙정보부 출신의 김기춘이 주도한 이 블랙리스트 통치에 우익적이고 반민주적인 사상이 작용하지 않았을 리 없지만, 특검은 세

월호 추모조차 좌편향으로 낙인 찍은 것은 “이념적”이라기보다 친박이나 아니냐 하는 “정파적” 악행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규정했다.

“청와대의 입장에 이견을 표명하는 세력은 ‘반민주’ 세력으로 규정한다는 인식” 자체가 특검이 보기에 “정파적” 기준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블랙리스트를 통해 예술가들을 몰아맨 것은 권력을 남용해,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자유민주주의를 해친 일이라는 것이다. 특검은 불법적인 블랙리스트 통치만으로도 헌법 위배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 점에서 현재의 박근혜 탄핵 사유에서 블랙리스트 문제가 빠진 것은 유감이다.

세월호 참사

현재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근혜의 대처에 문제가 있었지만, 직책의 성실 수행 여부는 탄핵심판 절차의 판단 대상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 세월호 참사에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판단에 동의할 수는 없다.

세월호 참사 구조 문제는 단순히 부작위에 의한 대통령의 의무 이행 실패 문제로만 볼 수 없다. 박근혜는 구조에 완전히 실패했을 뿐 아니라, 그 참사 원인, 구조 실패 과정을 밝혀 내려는 모든 노력을 방해하고 중단시켰다. 세월호 특조위를 무력화시키고 결국 해산시켰을 뿐 아니라 특검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수사도 가로막고 결국 황교안을 통해 특검을 해산시켰다.

특검은 대통령의 대면 조사, 청와대 압수수색이 “실행되지 않아 대통령의 구체적 행적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특검은 주로 오전에 청와대에 들어와서 박근혜의 머리 손질을 해 주던 전담 미용사에게 청와대가

4월 15일에 ‘내일은 들어오지 않아도 된다’는 연락을 받았음을 밝혀냈다.

그리고 특검은 박근혜의 피부미용 시술을 한 것으로 밝혀진 시기와 이 전담 미용사들이 청와대에 들어간 날을 비교해 “주로 미용시술이 있었던 날(또는 그 다음날)은 000, 000가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았을 개연성은 있음”이라고 판단했다.

결국 특검은 세월호 참사 당일의 7시간뿐 아니라 “4월 15일 저녁부터 4월 16일 오전 10시경까지 무엇을 하였는지”에 관한 최소 20시간의 의혹을 제기한 셈이다.

이런 의혹은 추가 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할 뿐 아니라, 적어도 직무유기에 의한 과실치사일 개연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박근혜가 세월호 참사 3년 동안 진실 규명을 끝내 가로막고 심지어 현재의 당일 행정 규명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음을 봤을 때, 그 개연성에 대한 의심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세월호 참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판결과 달리, 단지 당일 직책 수행의 성실성 문제는 아닌 것이다.

박근혜의 탄핵 사유에는 세월호 참사도 포함됐어야 했다. 보수적인 현재가 세월호 참사를 탄핵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촛불 운동 속의 많은 사람들에게 세월호 참사는 탄핵 제1의 사유였다.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책임자 처벌을 위한 기증의 운동은 계속될 것이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노동자연대는 이윤을 위해 노동자 대중의 삶을 희생시키는 자본주의를 반대하고 이와는 다른 세계를 추구하는 노동자 운동 단체입니다.

노동자연대는 다른 세상을 만들 힘은 노동자 계급과 피억압 대중의 아래로부터의 투쟁에 있다고 믿으며, 노동자 투쟁에 참여하고, 연대를 건설하고, 투쟁 승리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며 노력해 왔습니다.

노동자·학생·청년 등으로 구성돼 있고, 서울, 부산, 인천, 경기, 울산, 강원충북 등에 지회들이 있습니다. 전교조·공무원·금속·건설 등에 노동자 모임이 있으며, 더 많은 부문에서 노동자 모임을 만들려 합니다.

이름

이메일

소속 (☐ 직장 ☐ 노조 ☐ 대학교 ☐ 종교동교회 ☐ 기타)

[선택] 휴대전화번호

회비/약정액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 2만 원 ☐ 3만 원 ☐ 4만 원 ☐ 5만 원 ☐ 기타 () 원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년 월 일 (서명)

www.workerssolidarity.org

※ 신청서를 작성해 사진을 찍어 010-4909-2026 또는 mail@workerssolidarity.org로 보내 주세요.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 02-2271-2395 / 팩스 02-2271-2396 / 이메일 mail@workerssolidarity.org



탄핵 인용 직후 기뻐하며 청와대로 행진하는 사람들.

기쁘다! 박근혜 파면 이제 박근혜의 유산을 청산하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를 파면(탄핵)했다. 지긋지긋한 박근혜를 만 4년 만에 민중의 힘으로 중도 하야케 했다. 마침내! 지난해 10월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이 본격화된 지 1백32일 만이다.

박근혜 파면은 1백32일간의 눈비를 마다않고 광장을 지킨 1천5백만 촛불의 금지이고 훈장이다. 그리고 지난 4년간 반(反)박근혜 투쟁의 선두에 서왔던 노동운동의 자부심이다. 공장에서, 대학에서, 성주에서, 진주에서 전국 곳곳에서 정권의 악행에 맞서 싸워온 민중의 정의다.

수십 년간 이 나라를 지배해 온 독재 세력에 찼줄을 댄 강성 우익 박근혜 정권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민중을 “개·돼지 취급”해 왔다. 공작 정치로 대선 승리를 훔쳤고, 표를 얻기 위해 남발한 복지 공약을 간단히 취소했다. 기업주들이 책임져야 할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 계급에 전가해 왔다. 생때같은 자식들이 죽은 이유라도 알게 해 달라는 부모들을 좌익 세력 취급하며 적대했다. 일자리 같은 일자리를 달라는 청년들에게 (갓가지 위험이 있는) 중동이나 가 보라고 무시했다. 고통 전가를 중단하고 대선 공약을 지키라는 백남기 씨를 물대포로 죽이고는 그 사인(死因)마저 속이려 했다. 일자리 찾는 여성들에게 고작 저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내놓고는 애나 많이 낳으라고 모욕했다. 노동운동, 사회운동, 문화계 등을 사찰하며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자유로운 표현과 민주적 권리를 침해했다. 국정원과 재벌이 자금을 댄 관제 데모와 방송 장악으로 여론을 조작해 왔다.

이 모든 악행들에 대한 원한과 증오가 거대한 퇴진 운동으로 수렴됐다. 그리고 결국 그 뜻을 이뤘다. 박근혜 일

당과 우익은 끝까지 발악했지만, 최소한의 정의를 실현하려는 민중의 의지가 더 강했다. 세월호 참사로 구조도 못 받고 희생된 원혼의 분노가 그들의 생때보다 더 강했다.

오만한 권력자들에게 더는 알보이지 않겠다고 결심한 대중은 국회의 탄핵소추 가결 후에도 흠어지지 않았다. 줄기차게 모이면서 박근혜의 즉각 퇴진과 구속을 촉구해 왔다.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부를 이끈 황교안에게도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세월호 3주기에는 반드시 박근혜를 몰아내고 구속시켜서 희생자들을 만나고 싶다고 염원했다. 오만방자한 우익들이 우리를 알고 보고 바람 불면 꺼질 촛불이라고 비웃었지만, 촛불은 바람을 타고 들불처럼 번지고 커져 왔다.

“염병하네”

바로 그 힘으로 이미 박근혜 탄핵 전에 정권 실세들인 김기춘·조윤선·안종범 등이 구속됐다. 박근혜의 분신과 다름없던 최순실이 구속됐다. 그의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이 취소됐고, 부정 입학에 연루된 이대 총장과 관련 교수들이 구속됐다. 심지어 사후 퇴학 처분으로 그 다이아몬드 수저의 고졸 학력마저 박탈됐다. 그리고는 70년 불구속 신화라던 삼성 재벌의 총수 이재용까지 구속됐다.

이는 박근혜가 더욱 심화시킨 불평등하고 부정의한 사회를 뜯어고치고 바꾸는 일의 출발일 뿐이다. 대선으로 박근혜 정권이 몰려난다고 해도 앞으로 60일이나 기다려야 한다. 이 점을 이용해, 여전히 독재를 미화한 국정교과서가 떠돌고, 사드 등 미국의 대량살상무기들이 서둘러 들어오고 있다. 고통 전가와 노동 개악도 완전히 중단된 것이 아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기업주들을 위한 고통전가와 친제국주의 정책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도 계속 좌절될 것이다. 박근혜도 구속을 피하려고 온갖 “염병하네” 할 짓들을 해낼 것이다. 앞으로의 재판에서 이 모든 적폐 인물들의 구속 판결을 받아 내는 것도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광장의 촛불이 계속 타올라야 하는 이유다. 여전히 민중이 거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다. 특히, 노동자들이 승리감을 자신감으로, 일터의 반란으로 번지게 해야 한다.

물론 적폐와 싸우는 일, 정권 퇴진 염원의 밑바탕에 깔린 불평등과 부정의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일에는 더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더 효과적인 정치와 전략이 필수적이다. 이 과정에서 쓰디쓴 논쟁과 난관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을 가질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다. 진보진영 일각에서도 정권 퇴진 운동을 공상이라고 비웃던 반년 전과는 분명히 상황이 다르다.

이제 사람들은 4년 전 박근혜 당선에 좌절하고 한숨 짓던 사람들이 아니다. 대중 스스로의 힘으로 사악한 통치자의 중도 하차를 이뤄 낸 사람들이다.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오래 핏빛 독재를 자행했던 세력을 계승하고 싶어 했던 바로 그 정권을 끝장낸 사람들이다.

여세를 몰아 정권의 청산을 위한 투쟁을 이어가자. 일터에서, 학교에서, 거리에서, 지역사회에서 노동자·민중의 조건 개선과 해방을 위해 싸우자. 교만한 지배자들에게 단결과 연대의 힘을 보여 주자. 권력을 쥔 자들에게 주눅들지 말고 그들에게 우리를 존중하라고 말하자. 박근혜 퇴진은 투쟁하는 민중의 자랑이다.

분노의
촛불 세대를
위한

토론 광장

4월 29일(토) - 4월 30일(일)
장소: 서울 (추후 공지)

주최 **노동자연대**
workerssolidarity.org

주제들

- ★ 박근혜 퇴진 운동의 교훈
- ★ 2017년 대선 이후의 전망과 촛불 세대의 과제
- ★ 이 땅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 — 자본주의와 여성 차별
- ★ 세월호 참사, 거짓말과 진실
- ★ 우리가 아는 민주주의, 우리가 모르는 민주주의
- ★ 세월호 참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 국가는 무엇인가?
- ★ 국정 역사교과서 비판 — 바로 보는 한국 현대사
- ★ 트럼프, 아베, 시진핑, 푸틴 — 열강들의 각축장이 돼 가는 한반도
- ★ 왜 이토록 불평등한가? — 마르크스주의와 계급
- ★ 비정규직의 서러운 현실과 저항
- ★ 왜 해발전은 나쁜 에너지인가?
- ★ 마르크스가 촛불 세대에게 말을 건다 — 마르크스주의의 현재적 의미

- ★ **이호중** 전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위원 (유가족 추천)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최영준**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공동상황실장
- ★ **김하영**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조직노동자운동팀장

... 등 더 많은 연사를 섭외 중입니다.

※ 업데이트 되는 소식을 웹사이트(workerssolidarity.org/forum2017)에서 확인하세요.

문의 02-2271-2395 / 핸드폰 010-4909-2026 (문자 가능) / mail@workerssolidarity.org

촛불은 어떻게 켜졌는가?

극우 언론인 조갑제는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의 동력을 ‘언론의 난’이라고 주장했다. 조종동이 ‘최순실 마녀 사냥, 대통령 인민재판, 촛불 우상화’를 주도했다는 것이다.

알못계도 진보·좌파 진영 안에서 도 촛불이 〈조선일보〉와 JTBC의 폭로전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는 이데올로기주의적이고 음모론적인 시각이 있다.

위기에 처한 박근혜로는 우파 정권 재창출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본 〈조선일보〉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폭로를 시작했다는 게 〈조선일보〉큰 그림설의 요체다.

매우 우파적이고 친기업적인 〈조선일보〉가 우파 정권 재창출을 지지하는 것은 새삼스럽지 않다. 그러나 음모론과 달리 사태는 〈조선일보〉뜻대로 전개되지 않았다. 사태 초기에 〈조선일보〉는 박근혜 탄핵이 아니라

(퇴진은 말할 것도 없고) 박근혜 2선 후퇴를 주장했다. 1992년 노태우가 김영삼과 갈등하다 민자당(민주자유당)을 탈당하고 현승종 ‘중립’ 내각을 출범시킨 것을 근사치 모델로 한 발상이었다. 그러나 실제 상황 전개는 〈조선일보〉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

었다. 12월 9일 국회는 2백30만 촛불에 휩쓸려 탄핵초추안을 가결시켰다.

한편, 박근혜 퇴진 운동 지지자들은 분명 JTBC, 더 정확히 말해 손석희 사장에게 일체감을 느꼈다. 낯선 정치 풍경이 아닌 것이, 모든 거대한 대중 운동 초기에 개혁주의적 의식이 참가자 다수를 지배한다. 1905년 러시아 혁명은 정교회 사제(가프)가 이끈 노동자들이 행렬을 이뤄, 경찰 간부와 공산주의 학정을 해결해 달라고 차르에 청원하면서 시작했다.

재벌 미디어 그룹을 경영한다는 점이 손석희 앵커의 보도 내용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지만 노동자 투쟁 일반에 대한 JTBC 보도는 별로 많지 않다. 철도 민영화에는 반대했지만 말이다. 손석희 씨는 촛불 운동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이미 손석희의 〈뉴스룸〉은 세월호 참사를 2백 일 동안 연속 보도하면서 참사에 비통함을 금치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신뢰를 받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JTBC가 촛불을 만들었다고까지 주장하는 것은 레닌이 러시아 혁명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것만큼 엘리트주의적이고 비

(非)역사유물론적인 주장이다.

퇴진 운동은 박근혜 일당의 부패 문제가 기록적 또는 뇌란이 돼 그동안 커커이 쌓인 대중의 분노를 집화시킨 결과로 분출했다. 부패는 박근혜 정부의 태생적 약점이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집권 초기 인사 실패, 세월호 참사 등등. 이렇듯 ‘박근혜 게이트’는 출범 당시부터 박근혜 정부에 내장돼 있었다.

그러나 처음에는 박근혜 임기가 너무 많이 남아 많은 사람들이 싸워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갖지 못했다. 선거를 기다려야 한다는 생각. 경제를 회복시킬 수도 있다는 기대감. 하층민에게는 복지를 제공할지 모른다는 환상 등이 작용했다.

그러나 경제 위기가 심화하면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가 산산이 깨졌다.

게다가 조선업·해운업 구조조정과 주요 경제정책들을 둘러싼 지배자들의 내분이 심각해졌다. 지난해 4·13 총선에서 정부 여당이 참패한 후 지배자들 사이에서 우파 정권 재창출이 어려울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이 점증한 것도 내분을 격화시켰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부패의 실체와 세부적 양상이 폭로되기 시작했다.

누가 촛불을 들었는가?

지배자들의 내부 갈등 격화는 노동자들의 저항을 자극했는데, 이것도 박근혜의 위기 약화에 한몫했다. 특히, 퇴진 운동이 분출하기 직전에 벌어진 두 개의 노동자 투쟁이 지배자들을 긴장시켰다.

현대차 노동자들이 12년 만에 전면 파업을 벌였다. 지배자들은 현대차 파업의 경제적 손실이 3조 원대에 이르지 않겠는 관두었다. 9월 하순에는 철도가 중심이 된 공공부문 노동자 5만여 명이 파업에 나섰다. 화물연대 노동자들도 부산신항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며 물류 마비를 위협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졌고, 마침내 10월 29일 첫 퇴진 운동이 서울에서 시작했다. 특히, 철도 파업은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과 수도 중심지에서 만나면서 커다란 지지를 받았다.

박근혜 반대 운동은 2002년과 2008년의 촛불 운동과 달리, 시작부터 정권 퇴진을 요구했다. 1987년 6월항쟁 이래 처음으로 진보·좌파 운동 진영 전체가 동의한 정권 퇴진 운동이었다. 운동의 규모도 엄청나게 커서, 12월 초에는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인 2백30만 명가량이 항의 집회에 참가했다.

운동 참가자들은 단지 부패에만 항의를 한정하지 않았다. 박근혜의 4년 ‘학정’들에 대한 어마어마한 분노가 쏟아져 나왔다. 그런 점에서 운동 지도부인 ‘퇴진행동’ 측이 노동자들의 참가와 독자적인 투쟁을 고무하지 않은 것은 크게 아니다.

이 운동에는 미조직 노동계급 사람

들이 개별적으로 참가한 경우가 많았다. 〈한겨레〉는 기존 조직이 아닌 개인들의 운동이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물론 거대한 운동이 갑자기 일어나면 미조직된 개인들이 운동에 뛰어들어 큰 활력과 놀라운 자발성·헌신성을 보여 주는 것은 역사에서 매우 흔한 일이다.

그러나 이번 운동 과정에서 ‘기존 조직이 거부당했다’는 〈한겨레〉의 평가는 전혀 사실무근이다. 2002년과 2008년 촛불 때는 조직된 좌파를 배제하는 정서가 강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퇴진 운동이 규모 면에서 비약하게 된 계기는 11월 12일 노동자대회였다. 민주노총 노동자 15만 명이 참가했다. 그런데 노동자대회가 진행되던 그 시간에 이미 민주노총 조합원들보다 몇 배 많은 사람들이 집회에 모여들었다. 또, 철도 파업은 퇴진 운동 참가자들한테서 커다란 지지를 받았다. “조직 노동자들이 고립돼 있다”는 진보진영 온건파의 주장이 전혀 참말이 아님을 보여 줬다.

노동운동과 좌파가 선구적으로 이 운동을 발의했다. 특히 퇴진 운동이 처음 분출한 10월 29일부터 퇴진 운동이 전국노동자대회와 결합되는 11월 초순까지 노동운동과 좌파는 주도적인 구실을 했다.

그러나 노동운동과 좌파가 퇴진 운동을 정치적으로 지도하지는 못했다. 강력했지만 헤게모니적이진 못했다. 퇴진행동 온건파들은 노동계급, 특히 조직된 노동계급의 참가를 특별히 호소하지 않았다. 그들

은 이 운동이 정치적 부패에 항의해 선거로 정권을 교체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을 원치 않았다.

민주노총 지도자들도 형식적인(11월 30일) 하루 파업 외에는 파업 투쟁을 통해 퇴진 운동을 심화시키려 하지 않았다. 자신들이 중차대한 국가권력 문제를 감당하지 못할 거라는 소심함 탓이었을 것이다.

좌파로 말할 것 같으면, 특히 노동자연대는 선구적으로 10월 29일 퇴진 집회를 발의하고 이 운동에 적극 뛰어들었지만, 조직 규모가 상황 전개에 계급투쟁의 성격을 부여하는 돌파구를 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민주노총 집행부가 제안한 민중단일후보 전술이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된 것도 퇴진 운동 헤게모니의 한계와 관계 있다. 노동운동이 퇴진 운동에 정치적 지도력을 행사하지 못함에 따라 노동계의 독자적 대선 후보 전술이 지지를 받지 못한 것이다. 운동의 최대 수혜자는 민주당이 독차지하고 있다.

퇴진 운동은 박근혜 일당의 정치적 부패에 반대하는 운동으로, 민주주의 투쟁이었다. 그런데 퇴진 운동이 짧은 시간에 폭발적으로 분출했다는 것은 이미 그전에 물밑에서 정치적 급진화가 이뤄지고 있었다는 뜻이다. 4·13 총선에서 집권당이 참패한 것이나 7월부터 노동자 투쟁이 고요된 것이 그런 정서가 표출된 사례들일 것이다. 좌파라면 박근혜 퇴진 촛불 운동 속에서 노동자들의 참가와 독자적 요구를 위한 투쟁(특히 파업을 포함해)을 강조해야 했다.

박근혜 추문 폭로에서 파면까지

박근혜 퇴진 운동의 의의와 과제

국민 감정에 기름을 부은 지난해 10월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폭로가 마침내 박근혜 파면으로 일단락 됐다. 넉 달 넘게 완강하게 퇴진 촛불을 치켜든 민중의 명백한 승리다!

박근혜는 엄청난 범죄와 거짓말이 백암하에 드러나도 스스로 몰라나지 않았다. 박근혜의 권력 집착은 소름 돋을 정도였다. 세월호 침몰로 수백 명의 아이들이 죽어 가는 순간에 박근혜가 ‘울림머리’ 손질을 하고 있었다는 대목(‘상징 조작’을 통한 권력 행사를 위해)에 이르면, 박근혜의 권력 집착은 사이코패스와 다름없다고 느끼게 된다. 4년여 전 이 나라 지배계급은 박근혜의 이런 ‘상징 조작’을 통해 노동계급을 다스리고자 대선에서 일처단결해 박근혜를 밀어 준 바 있다. 지금 그들은 내분해 있지만, 여전히 만만찮은 지배자들이 박근혜를 편두고 있을 것이다. 가령 구속된 이재웅이 박근혜의 파면을 기뻐할까? 자유통 의원 60명도 박근혜 파면에 반대하고 있다.

올해 들어 박근혜의 반동이 강화되기 시작하자 퇴진 운동은 그에 반작용하면서 다시 성장했다. 덕분에 운동 지지자들의 정치적 각성이 광범하게 이뤄졌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초추안이 가결된 이래 각종 여론 조사에서 탄핵 찬성 의견은 꾸준히 70~80퍼센트를 유지했다. 탄핵 반대 의견은 20퍼센트 수준이었다. 특히 눈여겨볼 것은, 현재 결정에 대한 불복 의사 비율이었다. 탄핵 찬성 쪽의 (각각 시) 불복 의사 비율은 60퍼센트 가까이 됐다. 탄핵 반대 쪽의 (인용 시) 불복 비율은 30퍼센트 정도였다. 무엇보다, 국회 탄핵안 가결 뒤에도 석 달 동안 매주 평균 수십만 명 규모의 운동이 유지됐다. 바로 이 점이 현재의 매우 보수적인 재판관들조차 감히 탄핵을 기각할 엄두를 못 내게 했을 것이다.

우리 편의 지금 승리는 다음 국면의 정치적 과제를 제기한다. 박근혜를 쫓아낸 대중의 거대한 힘과 에너지는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 이 물음에 답하고자 퇴진 운동을 돌아본다.

퇴진 운동 속의 정치적 세력관계

박근혜 퇴진 운동 국면에서 핵심 정치 플레이어는 세 세력이었다. 첫째, 박근혜 정권과 옛 새누리당. 그리고 뇌물 비리에 연루된 핵심 재벌들이었다. 둘째, 노동자와 민중(원대배는 사람들이 있었다. 셋째, 그 중간에 주류야당이 있었다.

주류 야당, 특히 민주당의 존재는 퇴진행동 안에서 언제나 뜨거운 쟁점이었다. 민주당은 부패 문제에조차 깨끗하지 않다(그 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 중 한 명인 안희정은 부패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전력이 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민주당은 처음에 박근혜 퇴진을 지지하지 않았다. 오히려 거국중립내각과 특검을 요구했다. 그러다 퇴진 운동이 매우 큰 규모로 성장한 12월 8일야야 박근혜 탄핵을 결정했다. 더구나 철도 파업 종료로 전제로 한 결정이었다.

이때까지 아래로부터의 퇴진 운동에 주도권을 빼앗겼던 민주당은 탄핵안 통과라는 의외 절차로 정치적 주도권을 쥐기 시작했다. 일종의 공중납치였다.

탄핵 이후, 퇴진 운동은 어디로?

현재가 박근혜 파면을 결정한 것은 퇴진 운동의 중요한 승리이지만, 상황 종료는 아니다. 현재는 박근혜가 “중대한 법 위배 행위”를 저질렀다고 했다. 따라서 박근혜는 구속돼야 한다. 그가 민가에서 반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히 놔둬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박근혜가 제거됐어도 박근혜 정권은 남아 있다. 어쩌면 국정원 같은 우익이 특설대는 기구들이 선거 부정을 자행할 위험성도 존재한다. 우익도 다시금 거리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대선 기간에 세력균형을 뒤집으려 애쓸 수 있다. 그래야 선거에서 기회가 올 수 있을 테니까 말이다.

특히,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부’가 박근혜의 적폐들을 밀고갈 것이다. 현재 결정 직전에 황교안은 안보와 치안을 매우 강조했다. 커다란 승리로 자신감을 얻은 대중이 행동에 동원을 해제하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사실상 같은 맥락에서 기업주 언론들도 현재 결정 이후 “통합”의 합창을 부른다. 민주당도 이 합창에 가세했다. 그러나 박근혜 개인이 제거됐다고 해서 대중의 삶이 저



이 환희를 보라!

로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박근혜 개인의 제거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박근혜가 만들어 낸 제도와 인물을 청산하는 운동을 해야 한다.

따라서 퇴진행동 조직은 유지되어야 하고, 때때로 촛불은 계속돼야 한다. 한편, 현재가 박근혜 파면 결정을 내림으로써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르게 된다. 지난 몇 년간 그리스의 반긴축 투쟁은 시리아의 집권으로, 스페인 광장 정치 운동은 포데모스 창당으로, 영국의 익도 다시금 거리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대선 기간에 세력균형을 뒤집으려 애쓸 수 있다. 그래야 선거에서 기회가 올 수 있을 테니까 말이다.

그런데 문재인은 2012년 대선 때보다 오른쪽에 있으면서 최근 서구의 용어로 “극단적 중도파” 구실을 하고 있다. 경제 위기 상황 때문이다. 경제 위기는 개혁주의 정당의 운신의 폭을 좁힌다. 개혁주의 정당이 개혁을 제공한다는 약속

으로 집권하지만 막상 집권하면 체제의 포로가 돼서 개혁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집권해도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새 정부는 매우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문제인은 벌써부터 대중의 기대감을 낮추려고 한다. 그는 주되게 우파에 대한 대중의 두려움을 집권의 명분으로 삼으려 할 공산이 크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대선을 기다리기보다 박근혜 파면을 통해 얻은 자신감으로 스스로 투쟁을 벌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이 개혁을 제공하는 더 좋은 방법이다.

물론 이것은 선거 무용론으로 풀이돼선 안 된다. 현실정치에 영향을 미치려면 현실정치 속에서 한 축을 차지하는 개혁과 진보 열혈 대중의 정서와 접점을 이뤄야 한다.

그렇다면 좌파는 투표에 참가해서 그런 수심만, 수백만 대중에게 연대의 표시로서 모종의 진보적 또는 개혁적 투표를 해야 한다. 그러나 진보·개혁 열원 대중에게 아무런 환상도 갖지 말라고 경계심을 촉구하면서 그대야 할 것이다.



‘광창을 떠나려며 황교안이 비치고 있다.

트럼프, 오바마, 러시아 스캔들

미국 사회 최상층의 위기와 아래로부터의 투쟁

차승일

한국에서 박근혜가 파면당한 지금, 미국에서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탄핵 얘기가 돌고 있다. 지배계급 내 갈등이 계속 심화하며 좀처럼 수그러질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측근이자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마이클 플린이 2월 13일에 경질된 뒤로도 트럼프 측근들의 러시아 ‘내통’ 혐의는 계속 확산되고 있다. 법무장관 제프 세션스에 이어 트럼프의 사위이자 백악관 선임 고문인 재러드 쿠슈너, 트럼프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트럼프의 선거 운동 본부장이었던 폴 마나포트까지 도마에 올랐다.

이 때문에 법무장관 세션스는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관련 수사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래서 이 수사는 오바마 정부 시절 연방검사로 승진하는 등 ‘오바마의 검사’라고 불린 법무부 장관 대행 다나 보엔테가 진두지휘하게 됐다. 이 수사는 트럼프 측근들의 러시아 ‘내통’ 혐의와도 관련이 있으므로 트럼프로서는 지금 상황이 크게 못마땅할 것이다.

도청

당연히 트럼프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 트럼프는 처음에 FBI를 압박해서 사건을 덮으려 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며 비판이 거세지자 정보 유출설을 흘렸다. 이것도 먹히지 않자 “나쁜” 언론과 민주당의 음모설을 제기하더니, 급기야 오바마가 대선 기간에 자기 캠프를 도청했다고 주장했다. 증거는 없었다. 오바마 정계 복귀설이 나오는 상황에 찬물을 끼얹고 ‘프레임’을 바꾸기 위함인 듯하다. 하는 짓이 딱 박근혜 같다.

물론 플린이 대선 기간 주미 러시아 대사와 여러 차례 통화한 장소가 ‘트럼프타워’이므로, 오바마의 직접적 지시가 있었느냐 여부와 관계 없이 FBI 등 정보기관이 대선 기간 트럼프 캠프를 사찰했을 가능성은 없지 않다. 트럼프가 공화당 내에서도 일치된 지지를 받지 못한 후보였다는 점도 있다.

취임 초에 있기 마련인 밀월(허니문) 기간조차 없이 공방이 오가는 모습을 보며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미국 국가

라는 배가 폭풍우 치는 바다에서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지배자들 사이에서는 트럼프판 ‘워터게이트’가 다가온다는 얘기가 나온다. 전 백악관 법률고문 존 딘은 이렇게 말했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워터게이트 2탄으로 가기 시작한 것 같다.”

‘워터게이트’는 1974년 공화당 소속 대통령 리처드 닉슨의 탄핵으로 이어진 대형 정치 스캔들을 가리킨다. 즉, 트럼프도 닉슨의 운명을 밟을 수 있다는 얘기인 것이다.

지독한 성차별주의자이자 인종차별주의자인 강성 우익 트럼프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끌려 내려온다면, 정말 반가운 일일 것이다. 물론 트럼프는 순순히 스스로 내려오지는 않을 것이다. 자신의 정책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예컨대 트럼프는 항의 운동과 법원의 제동에 걸려 좌초한 ‘무슬림 입국 금지’ 행정명령을 살짝만 바꾼 새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지배자들의 권모술수로 트럼프가 제거될 수 있다는 치더라도 그 자리를 잇는 것이 부통령 마이크 펜스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마이크 펜스는 이라크·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조지 부시의 이데올로그 중 한 명이자 극성스런 낙태권 반대론자이다.

그리고 민주당과 국가 기구 내 트럼프 반대자들은 트럼프가 자유 시장 자본주의 국제 질서에 반기를 들며 추진하는 일부 정책과 ‘막가파식’ 정책 추진에는 반대할지라도, 그의 친기업·반노동자 정책, 무슬림 혐오적·인종차별적 정책, 낙태권 공격 등 반(反)여성 정책에는 큰 이견이 없다.

‘워터게이트’와 닉슨 탄핵의 배경에 당시 미국 지배계급이 베트남 전쟁 패배로 말미암아 큰 위기에 시달리던 상황과 반전 운동 등 강력한 아래로부터의 저항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즉, 미국에 맞선 베트남 민중의 영웅적 저항과 미국 국내에서 폭발한 반전 운동이 닉슨을 끌어 내린 것이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새로운 운동이 등장하고 있다. 트럼프에 반대해 벌어진 ‘여성 행진’, 인종차별적인 ‘무슬림 입국 금지’ 행정명령에 맞서 벌어진 택시노동자 파업과 시위 등이 그것이다. 이런 운동이야말로 트럼프를 끌어 내릴 진정한 힘이다.



여성 노동자들의 힘.

미국 전역 60곳에서 ‘여성 파업’이 일어난다

세계 여성의 날인 3월 8일 미국 전역 60여 곳에서 항의 시위와 파업이 일어났다. 이날 행동에는 ‘여성 파업’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엄밀한 의미의 파업은 아니지만 이날 하루 직장에 가지 않거나 집안일을 하지 않으며 여성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보여주자는 취지에서 조직자들은 ‘여성 파업’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날 시위 참가자들은 지독한 여성차별주의자인 트럼프에 대한 큰 분노를 표출했다.

뉴욕과 시카고 등지에서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필라델피아의 교사들은 파업을 벌였다. 파업에 동참하지 못한 많은 교사들도 집회에 나가서 일부 학교들은 문을 닫아야만 했다. 미국 초등학교 교사의 87퍼센트가 여성인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메릴랜드주(州) 프린스조지 카운티의 한 공립

학교 교장은 이렇게 말했다. “교사 1천 7백 명이 집회에 나갔다.”

이날 집회는 트럼프의 공격에 반대해 조직됐다. 지난달 트럼프는 전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의 ‘세계적 금지 명령’을 부활시켜, 해외에서 낙태 관련 정보 제공 활동을 벌이는 자선 단체에 지원금을 끊었다.

낙태권 방어

그중 한 단체가 가족계획협회이다. 3월 7일 트럼프는 계속 연방 정부 지원금을 받으려면 낙태 정보 제공과 시술을 중지하라고 이 단체에 요구했다. 그러나 가족계획협회는 이 제안을 거절했다. 이 단체에서 일하는 활동가는 이렇게 말했다. “돈을 미끼로 우리 환자들과 우리의 가치를 내버려라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수많은 미국 여성들에게 필수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은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많은 미국 활동가들은 ‘여성 파업’이 트럼프에 맞서는 더 광범한 운동의 일부라고 본다. 그들은 5월 1일 메이데이 집회를 포함해 더 큰 운동을 건설하려 애쓰고 있으며, ‘무슬림 입국 금지’ 등 인종차별에 맞선 운동과 연결시키려 하고 있다.

로스엔젤레스 ‘여성 파업’ 조직자는 이렇게 말했다. “‘무슬림 입국 금지’, 엄마와 아이를 떼어 놓는 정책에 반대하는 것도 우리가 오늘 파업을 벌인 이유입니다.”

미국 외에도 유럽 곳곳에서 세계 여성의 날의 맞아 집회가 열렸다. 한국에서도 2천 명가량이 참가하는 행진이 있었다.

인종차별적 공격을 재개한 트럼프

3월 6일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중동 6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새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지난달 추진했다가 미국 전역 공항에서 일어난 파업과 항의 시위로 좌초한 ‘무슬림 입국 금지’ 행정명령을

대체하는 것이다.

입국 금지 대상에 이라크를 제외하고 행정명령의 발효를 열흘 뒤로 했다는 점을 빼면 이전의 것과 별 다를 게 없다. 여전히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국민들은 ‘테러리

스트’ 취급을 받으며 미국 입국이 금지된다.

애초의 행정명령과 마찬가지로 이번 행정명령도 인종차별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저항이 있어야 한다.

wspaper.org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퇴진 운동을 돌아보는 특별 페이지 개장
“박근혜 퇴진하라!”, 133일의 기억

★ 성명

3.18~19 국제 공동 행동을 트럼프와 인종차별에 맞선 세계적 저항을
고무하는 디딤돌로 삼자!

★ 네덜란드 총선, 영국 정부의 EU 탈퇴 협상안 등

인종차별에 맞선 싸움이 곳곳에서 진행 중인 유럽

★ 인종차별적인 계절 이주노동자 제도 전면 시행 중단하라

★ 로봇과 인공지능, 그리고 실업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의 종말’이 다가온다고?

★ 철도 파업 보복 징계

박근혜 몰아낸 기세로 파업 보복과 민영화에 맞서자

알렉스 캘리니코스

저금리 대출로 지탱되고 있는 트럼프 정부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중앙위원장이다.

도널드 트럼프가 좌충우돌하며 위기를 겪고 있음에도 그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 한 가지를 대라면 미국의 주식시장을 꼽을 수 있다. 지난해 11월 그의 대통령 당선 이후 투자자들은 주가를 상승시키고 있다.

3월 2일 주식시장에 상장된 스냅[스마트폰 앱 스냅챗의 개발사]의 기업가치는 39조 원이나 됐다. 이런 상황은 1990년대 후반 ‘닷컴 호황’을 연상케 한다. 당시 IT부문의 “신경제” 열풍은 괴짜들을 하룻밤 사이에 백만장자로 만들었다.

트럼프는 주가 상승이 제 덕이라고 주장한다. 주식시장이 이렇게 들뜨는 것은, 일정 부분 트럼프가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사회간접자본 투자로 경기를 부양시킬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트럼프는 선거 기간에는 월스트리트를 비난했음에도 자신의 내각을 은행가들로 채웠다. 그리고 금융주들이 주식시장 급등을 이끌었다.

그러나 <파이낸셜 타임스>의 존 아서스를 비롯한 일부 시장 분석가들은 현재 상황에 회의적이다. 아서스는 2016년 초 중국 경제가 어려움에 처한



여전히 세계 주요 경제들은 거품에 의존한다.

것으로 보였기에 시장은 큰 두려움에 빠졌다고 주장한다.

당시 세계경제는 물가 하락으로 생산량이 줄어드는 심각한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에 빠질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런 두려움은 줄어들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사회는 미국 경제의 건전성을 낙관한다. 연준은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돼 온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요란스럽게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한 설문 조사에 응답한 경제학자 네 명 중 세 명 꼴로 연준이 올해 금리를 세 번 올릴 것이라고 예측했다.

아서스는 이렇게 말했다. “공급관리자들의 설문 조사는 … 미래에 대한 낙

관적 전망과 함께 성장 속도가 빨라질 것임을 보여 준다. 연준이 즐겨 사용하는 미국 물가 상승률 수치는 목표치인 2퍼센트에 거의 근접했다. 유럽은 이전의 아주 나빴던 수준에서 회복 중이라는 조짐을 계속 보여 준다.

“같은 주에 미국 주택가격이 다시 상승했으며 일본도 2년간의 디플레이션 이후 물가가 상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결정적으로, 1년 전 과도한 부채로 우려를 낳았던 중국 경제가 반등세를 이어 갔다. 중국의 생산자가격은 연간 약 6퍼센트씩 하락했으나 최근에는 7퍼센트 상승했다.”

그러나 이처럼 시장이 경제 성장을 기대하는 것이 과연 도널드 트럼프보

다 더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닷컴

1990년대 후반의 ‘닷컴 호황’은 금융 거품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가는 산업·상업 기업의 수익성과 상관없이 폭등했다.

2000년 초에 그 거품은 붕괴했다. 이는 여러 면에서 2008년 경제 위기의 예고편이었다.

투자 자문회사 720글로벌의 마이클 레보비츠는 최근 미국의 주가와 “실물”경제 사이의 간극이 ‘닷컴 호황’ 시절보다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1995~99년 국민소득은 해마다 4.08퍼센트 늘었다. 2012~16년에는

1.9퍼센트씩 늘어나는 데 그쳤다. 연간 생산성 성장률은 1995~99년에는 1.84퍼센트였지만 2012~16년에는 겨우 0.49퍼센트였다.

미국 정부의 부채는 2조 9천억 파운드[약 4천90조 원]에서 2010년대 중반에 13조 9천억 파운드[약 1경 9천 6백조 원]로 늘었다.

S&P500 지수 상위 5백대 기업들의 수익은 ‘닷컴 호황’ 시절 3년 동안 7.53퍼센트 증가했다. 그런데 2012~16년에는 3.84퍼센트 하락했다.

미국 경제의 기반만 허약한 것이 아니다. 지난해 중국이 성장률을 회복했는데, 은행들이 기업들에게 더 많은 돈을 빌려주도록 중국 정부가 장려한 덕분이었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은행들은 세계 어느 곳보다 대출을 많이 해 준 상황이다. 중국 은행들은 약 27조 파운드[약 3경 8천조 원]를 대출했는데 이에 견줘 유로존 은행은 25조 파운드, 미국 은행은 13조 파운드를 대출해 줬다.

한 경제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중국 금융 시스템의 엄청난 규모는, 경제가 은행 자금 투자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에 시달리고 막대한 신용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는 뜻으로, 축하할 일이 아니다.”

그러나 혁명이 카를 마르크스가 신용체제라고 부른 것에 의존하는 곳은 중국만이 아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계획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장기 금리는 많은 국가에서 낮게 유지되거나 인하되고 있다. 다시 말해 대출은 여전히 매우 싸다.

지금 시장의 거품을 낚는 것은 바로 이런 값싼 자금들이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544호 / 번역 최민혁

메스꺼운 안희정의 보수 환심 사기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의 효과로 원심력이 커진 중도 보수층을 얻기 위해 민주당은 우클릭을 하고 있다. 여기에는 집권까지 했던 기성 정당으로서 퇴진 운동 국면을 슬슬 정리해 정치 체제의 안정을 추구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 차기 집권을 예상한다면, 아래로부터의 운동이 활성화되는 게 좋을 리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 중 가장 오른쪽에 안희정이 있다. 안희정은 “탄핵 후 대연정으로 국론을 통합”해야 한다고 한다. 새누리당(자유한국당)도 “개혁 과제에 동의한다”면 연정 대상이라는 것이다.

안희정은 민주당이 집권해도 여소야대 정부이므로 개혁 과제를 실현하려면 새누리당을 포함하는 대연정이 필요하다고 강변한다. 지금도 민주당 의석이 절반을 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국면에서 어떤 법 하나도 통과를 못 시키고 있다”고 짐짓 현실주의를 가장한다.

안희정은 ‘개혁에 동의한다면’이라고 전제 조건을 달았다고 변명하지만



새누리당은 적폐 그 자체로, 청산 대상이다. 그 당 의원들은 ‘박근혜가 탄핵되면 아스팔트에 피를 뿌리겠다’는 집회에 참가해 박근혜 정권의 연장을 묵 놓아 외쳤다. 진보 개혁에 관심이 있기는커녕 지난 9년 동안 사람까지 죽여가며 그런 염원을 짓밟기 바빴던 이들에게 ‘개혁에 동의’를 구한다는 것 자체가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격이다.

우파와의 대연정으로는 애초에 진보적 개혁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대연

정(협치)을 하려면 상대방을 고려해야 하므로 ‘안희정 정권’은 적폐 청산 같은 개혁 과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이명박과 박근혜의 저질스런 통치와 심지어 부패범죄까지도 “선의”로 포장했다. 연합이 성립하려면 우선 상대의 선의를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안희정식 대연정론의 논리적 귀결이다.

대연정

이런 이유로 안희정은 퇴진 운동의 저변에 깔린 계급적 불만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는 듯하다. 즉, 평범한 사람들이 경제 위기의 고통을 떠안고 일을 해도 소득 격차가 커지는 불평등한 현실에 대한 불만 말이다.

연인원 1천6백만여 명이 촛불을 들고 세월호 진상 규명 방해, 노동개혁, 사드 배치, 문화계 블랙리스트, 국정교과서, ‘위안부 합의’, 언론 장악 등의 적폐를 해소하자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그 덕분에 민주당의 지지율도 오르고 덩달아 민주당 대선주자들의 지지율

도 올랐다. 안희정은 뻔뻔하게도 그런 촛불 민심에 역행하는 것으로 정권 획득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안희정이 제시하는 공약과 정책 기조들이, 지난 9년 새누리당 정권의 악행들을 청산하기는커녕 계승하는 것에 가까운 것도 우연이 아니다.

한반도를 제국주의 갈등의 한복판으로 밀어 넣으며 불안정을 부추길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 합의 존중’을 이유로 찬성한다. “공짜 밥” 운운하며 보편적 복지가 “청산돼야 한다”고 말한 것이나 반값등록금에 반대한 것도 짜증난다. 차별금지법도 “아직 빨라요”라며 반대한다. 박근혜가 추진한 ‘탄핵근무제 도입 및 재택근무 확대’를 여성의 경력 단절을 해결하겠다며 공약하는 것도 어이없다.

시장 경쟁이 필요하다는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요하다고도 얘기한다. 길어지는 세계경제 위기 때문에 곳곳에서 자본주의와 시장에 대한 회의가 자라나는 지금, 이런 노선은 교조적 친기업주의이지, 진정한 의미

의 현실주의도 못 된다.

노무현 정부 시절 친기업, 친제국주의 정책 추진에 한몫해 ‘삼성 장학생’으로 악명 높았던 인물답다. 그래서인지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으로 대중의 분노가 불타올랐던 1월, 안희정은 “돈이 많은 적든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반동적인 주장을 했다.

안희정은 “기존의 전통적 진영과 관점에서 본다면 제 얘기는 양쪽 모두에서 비난을 받을 수 있다”면서 자신이 고난을 무릅쓰는 선구자인 듯 행세한다. 또한 정권 퇴진이라는 심판을 받은 낡다 낡은 세력과 연합하겠다는 것을 그는 “새로운 정치”와 “시대 교체”로 포장한다. 역겨울 뿐이다.

안희정의 ‘시대 교체’에는 미래가 없고 안희정의 ‘새 정치’에는 거대한 거리 운동으로 표출된 평범한 사람들의 염원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그는, 한때의 신념을 잃고 제도정치에 들어가 체제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메스꺼운 인물이다.

이재환

한국에 도착한 사드

중국의 경제 보복 — “사드 철회가 유일한 해답이다”

김영익

3월 6일 기습적으로 사드 일부 체계(발사대 2기)가 경기도 평택시 송탄동의 미군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주한미군은 이를 영상으로 찍어 공개해 버렸다. 레이더를 포함한 나머지도 조만간 속속 한국으로 들어올 예정이다. 그래서 이르면 4월에 작전 운용이 가능하다. 이른바 ‘사드 알박기’다.

사드 배치는 중국이 한국에 대응 수위를 높여 오던 때 시작했다. 이 와중에 미국과 황교안 내각은 배치 작업을 시작했다. 이는 중국에 확실한 메시지를 준 것이다. 또한 새 정부 취임 전에 배치를 완료하겠다는 것이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사드 배치 소식을 두고 이렇게 논평했다. “미국 미사일방어망이 남한과 중국 사이에 썬기를 박았다.” 한국이 사드 배치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되돌리기 어려운 선택을 했다는 것이다.

사드 배치가 강행되면서, 한반도의 하늘은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됐다. 한·미·일의 통합 미사일방어체계(MD) 하에 사드, 패트리엇 미사일, SM-3가 노려보는 곳이 돼 가고 있다. 9일 KBS는 한국과 미국이 연합 미사일 사령부를 구성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통합 MD 운용이 가시화함에 따라 한·일 군사동맹의 시대도 눈앞에 와 있다.

거기에 현재 거론되는 미국 전술핵 배치까지 이뤄진다면, 그 즉각적인 물리적 위협의 범위는 단지 성주·김천만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가 될 것이다.

“대국주의”

사드 배치가 진행되면서 중국이 경제 제재에 본격 착수했다. 중국의 우선 타깃은 롯데그룹이다. 3월 9일 현재 중국 당국의 영업 정지 조치로 롯데마트 중국 매장의 절반 이상이 문을 닫았다. 앞서 중국 당국은 롯데제과, 롯데케미칼 등 롯데그룹 계열사 10여 곳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선양의 ‘롯데타운 프로젝트’ 공사를 중단시켰다.

중국의 제재 조처는 유·무형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국 여행상품 판매 중단 조치에 이어 비관세조처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2012년 닌자오(센카쿠) 분쟁 당시 일본이 중국한테 이와 비슷한 일을 당했다. 그래서 미국



군미군사출처 사진

트럼프가 한반도에 보낸 치명적 무기, 사드.

의 경제 전문 미디어그룹 블룸버그는 중국의 경제 보복이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사드 제재는 자유무역과 경제의 상호의존성 증대가 국가들의 갈등을 제어하고 전쟁을 막을 수 있다는 상식이 오류임을 보여 주는 가장 익숙한 사례가 될 듯하다.

중국의 대응이 본격화하기 전까지 박근혜 정권과 우익은 사드를 배치해도 중국의 경제 제재에 따른 타격이 미미한 수준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국회에서 황교안은 “한·중 관계는 고도화돼 쉽게 경제 보복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실제 피해가 생기자 이제 우익은 ‘중국의 오만한 대국주의(중화주의)’가 문제다, ‘치졸하다’ 하고 성토했다.

그러나 한국의 우익이 중국의 대국주의를 비난할 자격은 없다. 세계에서 가장 오만하고 위험한 ‘대국주의’ 국가인 미국을 더욱 가까이 끌어들이고서 말이다.

미국은 북한을 상대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고, 한국은 그 제재의 가장 충실한 협력자다. 지금도 미국과 한국은 김정남 피살을 놓고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카드

를 만지작거린다. 최근 미국은 미국의 북한·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중국 통신장비 기업 ZTE에 11억 달러가 넘는 벌금을 부과했다. 외교·안보 문제에 경제 제재를 동원한다는 점에서, 미국·한국이 중국을 비난하는 건 한낱 위선에 불과하다.

박근혜 정권은 중국의 경제 제재가 예상롭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를 묵살하고 사드 배치를 강행했다. 박근혜 정권이 자초한 일인 것이다. 중국의 제재가 확대돼 대중이 피해를 본다면, 정권이 책임을 져야 한다.

한편 사드 배치가 눈앞에 왔는데도 주류 야당들은 사드 반대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재명·심상정을 제외한 대선 주자들은 사드 배치 반대를 밝히지 않는다. (물론 이재명은 중국의 경제 제재에 대해 “사드 철회가 유일한 길이고 해답”이라고 명확하게 밝혔지만,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완성을 사드의 대안으로 제시한다.)

특히, 문재인은 이 와중에도 ‘외교적 노력과 국회 비준 동의 과정’을 거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내 1당의 유력 대선 주자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정육식 평화네트워크 대표가 지적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 “맥락상 이 발언은 본인 집권시에도 사

드 배치를 추진하되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은 외교적 노력으로 풀고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국회 비준 동의는 차기 정부도 사드 배치에 찬성할 때 성립할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선일보〉 등이 ‘문재인 측도 내심 집권 전에 사드 배치가 완료돼 부담을 덜기를 원하지 않냐고 힐난하는 것이다.

국민적 단결?

〈조선일보〉는 중국의 경제 제재가 “우리 내부 분열”을 노린다며 사드 문제를 놓고 국민적 단결을 촉구한다. 그리고 롯데 측의 사드 부지 제공을 반대한 시위를 두고 중국 정부 측이 좋아할 일이라는 뜻에서 “중국 땅에서나 있을 법한 롯데 공격”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나 국민적 단결은 단순한 신화다. 한국의 우익은 박근혜의 명백한 헌법 위반도 맹목적으로 옹호하는 세력이다. 게다가 제국주의는 국민 내 좌우 갈등을 더 불가피하게 만드는 동인이다.

박근혜 정권과 우익은 한미동맹을 강화해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서 한국의 국가 지위를 높이는 것이 국민에게 막대한 이익을 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노동자 계급은 그 이익의 일부를 공

유하기는커녕 한반도 긴장 증대에 따른 각종 희생과 부담(군비 증가에 따른 복지 희생, 병역 의무, 안전 위험 등)을 떠안는다.

중국의 경제 제재로부터 ‘우리’ 경제를 지키자고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부와 기업주들은 ‘강성 노조 때문에 중국으로 사업을 이전하겠다고 걸핏하면 협박하며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공격했다.

롯데는 불황 중에도 국내외에서 백화점 매장을 늘려 왔고, 호텔롯데는 중국 관광객 덕분에 지난해 면세사업에서 영업이익이 3천9백억 원을 거뒀을 것이다. 그러나 2015년 근로계약서도 없이 10년 넘게 백화점에서 일해 온 비정규직 노동자가 백화점 화장실에서 심장마비로 숨졌을 때 롯데 측은 ‘우리 직원 아니다’ 하며 매몰차게 외면했다. K스포츠재단에 바칠 70억 원은 아까워하지 않은 롯데가 말이다. 그런데도 ‘우리’ 롯데인가?

사드 반대 운동은 중국의 “대국주의적” 행태에 동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배자들의 위험천만한 친군국주의적 정책에 항의하는 것이다.

그 운동이 효과를 높이려면 오히려 “우리 내부 분열”을 기꺼이 감수해야 한다.



독자·지지자들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 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노동자 연대〉는 마르크스주의로 세계를 분석합니다.

- ▶ 투쟁하는 노동자와 노동자 연대를 건설하는 사람들의 신문
- ▶ 차별과 억압에 맞서 대안을 제시하는 신문
- ▶ 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논쟁적인 신문
- ▶ 국제적 저항과 운동 소식을 좌파적 관점에서 전하는 신문
- ▶ 저항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건설하는 신문
- ▶ 독자들이 판매자이자 기고자이고 후원자인 신문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wspaper.org**

정기 구독료(우편료 포함) : 1년(26개 호) 5만 원, 2년(52개 호) 10만 원

신청 : 02-777-2792, wspaper.org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 핸드폰 결제, ARS결제도 할 수 있습니다 | 입금 계좌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정기구독을 신청합니다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구독기간 ☐ 1년 (26개 호) 50,000원
☐ 2년 (52개 호) 100,000원
☐ 2년 이상 ()년

신청서를 작성해 사진을 찍어 보내 주세요. 담당자가 확인한 후에 연락 드리겠습니다.
010-6491-2792 / ws@wspaper.org